

統一情勢分析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2004. 3

전성훈(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통 일 연 구 원

< 요약 >

- 제2차 6자회담은 6자회담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성과를 거두었음.
 -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 채택
 - 차기 회담일정과 실무그룹 구성
 - 북핵문제의 일반원칙 표명

- 그러나 이번 회담은 당초의 기대에는 부합하지 못했으며, 북핵문제를 구성하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차를 확인하는 계기였음.
 - HEU 프로그램의 존재여부
 - 북한의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권한 인정문제
 - 핵 폐기의 단계와 소요시간
 - 핵 폐기 검증
 - 단계별 보상의 내용과 주체

- 6자회담의 향배를 결정하는 두 가지 변수는 북한이 CVID 원칙을 수용할 의향이 있는가와 미국의 대선 정국이 될 것임.

- <①CVID 원칙>: CVID는 미국이 불량국가의 핵을 포기시키는 원칙으로서 북한에 대해 이 원칙을 양보할 가능성은 없음.
 - 이는 북한이 CVID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6자회담의 성공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 뜻함.

- <②미국의 대선정국>: 이라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노선을 견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이 경우, 북한 역시 대선정국을 활용하여 북핵문제를 미 국내정치의 이슈로 부각시키려 할 것임.

- 한편, 차기 6자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부시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아지게 되는 경우,
 - 미국이 외교적 해결노력을 포기하고 대북 압박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 목 차 -

I. 성과와 의미	1
1.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 채택	1
2. 차기 회담일정과 실무그룹 신설	2
3. 북핵문제 해결의 일반원칙 표명	3
II. 각국 입장	4
1. 북한	4
2. 미국	5
3. 중국	7
4. 한국	8
5. 일본	8
6. 러시아	9
III. 주요 쟁점	10
1. HEU 프로그램	10
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한	11
3. 핵 폐기의 단계와 소요시간	12
4. 핵 폐기 검증	13
5. 단계별 보상의 내용과 주체	13
IV. 종합평가와 전망	15
1. 종합평가	15
2. 전망	16
<부록>: 제2차 6자회담 의장성명 전문	18

I. 성과와 의미

- 제2차 6자회담(2.25~28, 북경)은 2002년 10월 촉발된 제2차 북핵 위기를 다루기 위한 세 번째 회담이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는 회담이었음.
- 회담시한을 연장해가며 진통을 거듭한 끝에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몇 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해냄.
 - 주요 사안에 대한 현격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참가국들이 현 시점에서 회담의 틀을 깨서는 안된다는 데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임.
- 이번 회담의 성과와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1.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 채택

- 공동발표문 초안도 만들지 못한 채 의장이 구두로 협의내용을 요약해 발표했던 제1차 회담(’03.8)때와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의장성명이라는 다소 진전된 회담 마무리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참가국들이 6자회담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진지한 자세로 회담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
- 다만 당초 계획대로 의장성명보다 격이 높은 “공동발표문”(Joint Statement)이나 “공동언론발표문”(Joint Press Statement)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회담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향후 6자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한 가지 요인임.
 -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합의형식 가운데 가장 격이 높은 것은 공동성명임.

- 공동발표문은 합의사항이 정치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언론에 협상내용을 단순히 설명하는 공동언론발표문보다 격이 높음.

2. 차기 회담일정과 실무그룹 신설

- 의장성명에서 차기 회담의 시기와 장소(금년 2/4분기, 북경)를 명시함으로써 제1차 회담이후 6개월 이상을 소비하는 사태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음.
 - 다만 당초 2개월에 한번씩으로 회담을 정례화하자는 우리 대표단의 제안에는 미치지 못하는 합의임.
- 차기 본회담을 준비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될 실무그룹을 신설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본회담을 측면 지원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됨.
 - 6자회담의 실무그룹은 아세안지역포럼(ARF)의 “회기간 회의”(Inter-Sessional Support Group Meeting)와 같이 전문가들이 차기 본회담에서 논의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논의·정리하고 대강의 토의방향을 정해서 본회담에 보고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실무그룹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는 핵 동결·폐기와 검증, HEU 프로그램, 대북 보상과 지원 등임.

3. 북핵문제 해결의 일반원칙 표명

- 참가국들이 북핵문제의 해결에 임하는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에 동의한다는 의지를 표명함.
 -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유익하고 긍정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 모든 참가국들의 협상에 임하는 태도가 진지했음.
 - 상호존중, 대화, 평등에 기초해서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함.
 - 핵문제와 더불어 관련 관심사를 상호조율해서 다루기로 합의함.

- 다만 일부 원칙의 경우 관점과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음에 유의함.
 - 특히 관련 관심사를 상호조율한다는 원칙의 경우, 북한은 안전보장과 경제지원 등 반대급부에 국한하는 반면, 미·일은 일본인 납치, 미사일 문제의 해결까지로 확대·해석함으로써 회담을 어렵게 할 수 있음.

II. 각국 입장

1. 북한

- 북한은 북핵문제의 성격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산물로 규정하고,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해야만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기본입장을 밝힘.¹⁾
 - 구체적으로 미국에 대해 다음 사항을 요구함: ①불가침 협약, ②자주권 존중 및 북·미 관계개선, ③북한의 경제발전 방해 금지.
 - 미국 때문에 핵 억제력을 가지게 된 북한은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려 한 리비아와는 다르다는 점도 밝힘.²⁾

- 아울러 북한은 기존의 “일괄타결과 동시행동” 입장을 고수했음.
 - “일괄타결과 동시행동”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한꺼번에 합의해서 북·미가 동시에 합의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미국의 “선 핵폐기, 후 보상” 입장에 대한 대응방안임.

- 회담 이틀째인 26일 북한 대표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선 핵폐기 입장을 버리지 않아서 회담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미국 대표단을 비난함.
 - 회담 종료 후에도 제2차 6자회담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적대정책을 추구하려는 미국의 본심이 드러났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대북정책을 변화시킬 의지가 없는 한 6자회담도 핵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함.³⁾
 - 아울러 미국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시간을 끈다고 불리할 것

1) 북측 수석대표 기초발언문(2.25); 「조선일보」, 2004년 2월 26일.

2) 「조선일보」, 2004년 2월 26일.

3) 북한 외무성대변인 발언, 「조선중앙방송」, 2004년 2월 29일.

이 없으며, 그동안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취해 나갈 것이라면서 핵 억제력 증강 의사를 밝힘.⁴⁾

○ 주요 쟁점의 하나인 “고농축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HEU) 프로그램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강력한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미국이 거짓 정보를 가지고 핵 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함.⁵⁾

- 미국이 증거를 제시하면 HEU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과 핵의 평화적 이용권한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밝힘.

○ 수석대표가 김계관으로 대체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번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자세는 1차 회담에 비해 진지했던 것으로 평가됨.

- 미국도 북한대표단이 1차 때에 비해 전문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함.⁶⁾

2. 미국

○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함.

- CVID는 제네바 기본합의의 대상이었던 플루토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2002년 10월 새로이 제기된 HEU 프로그램도 다시 복원할 수 없게 완전히 폐기되어야 하며 이를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상징함.

4) Ibid.

5) 김계관 수석대표 기자회견, 「연합뉴스」, 2004년 2월 28일.

6) Joseph Kahn, “U.S. and North Korea agree to more talks,” *New York Times*, February 29, 2004.

-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CVID 원칙이 북한을 제외한 다섯 나라에 의해 공식적으로 수용된 것을 회담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함.⁷⁾
 -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제기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임.

- 회담에서 밝힌 미국의 입장을 요약하면, 미국이 제시한 북핵 폐기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원칙 하에,
 - “조율된 단계”(coordinated steps)를 통해서 북한이 CVID를 약속하면 다자간 안전보장을 논의할 수 있고, 핵 폐기가 거의 완료단계에 이르면 북·미 관계개선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임.⁸⁾

- 미 국무부는 회담 종료 후 언론성명을 통해 이번 회담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진전을 이뤘고 관련국들과 가진 고도의 협력에 만족한다는 공식평가를 발표함.
 - 그러나 국무부의 공식평가와는 달리, 이번 회담을 둘러싸고 미 행정부 내의 갈등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며, 폐막 시 발표할 문건을 둘러싸고 워싱턴의 강은파간에 벌어졌던 실랑이가 대표적인 사례임.⁹⁾

- 부시 대통령은 회담 기간 중(2.27) 북경의 협상 팀에게 북한이 CVID를 약속하지 않으면 6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인내가 한계에 달할 수 있다는 훈령을 보냄으로써, 외교적 해결 이외의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함.¹⁰⁾

7) *Opening Remarks to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James Kell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March 2, 2004.

8) Glenn Kessler, “Bush signals patience on North Korea is waning,” *Washington Post*, March 4, 2004, p. A14.

9) 『동아일보』, 2004년 3월 2일.

-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함으로써 북핵문제가 미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의 하나가 될 것임을 예고함.
 - 민주당 대선주자로 결정된 케리는 6자회담이 지지부진했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이 되면 핵뿐만 아니라 경제와 인권 등 모든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무력을 사용해야 할 상황을 예방하겠다고 주장함.¹¹⁾

3. 중국

- 개최국인 중국은 전방위적인 외교력을 가동해서 이번 회담을 성사시켰으며, 특히 북·미의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양측의 견해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함.
 - 중국은 이번 회담에 북한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중유제공과 유리공장 건설을 약속함(5천만 불 상당).
- 중국은 참가국간의 견해차가 크다는 인식하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달래면서 최소한 협상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임.
 - 이런 입장은 “求同尊異”(공통점을 찾지만 입장차는 존중한다)로 요약할 수 있음.
 - 중국 외교부장도 폐회식에서 심각한 견해차이가 존재하고 앞길이 순탄치 않지만 시간은 평화의 편에 있다고 밝힘.¹²⁾
- 북한의 HEU 프로그램과 관련, 증거를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했고, 검증을 통해 핵 동결이 확인되면 북한에 대해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한국의 입장도 지지함.

10) Glenn Kessler, “Bush signals patience on North Korea is waning.”

11) 『동아일보』, 2004년 3월 2일.

12) Joseph Kahn, “U.S. and North Korea agree to more talks.”

4. 한국

- 한국은 북·미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소위 “3·3·3 접근방식”에 의거해서 북핵 3단계 해법을 제시함.¹³⁾
 - 즉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을 **3단계**로 나누고, 이에 맞춰서 대북 안전 보장을 **3단계**로 나누어 제공하며, 북한의 핵동결 주장을 **3가지** 조건 하에서 수용한다는 것임.

- <①북핵 해결 3단계>: 핵포기 선언 → 핵 동결·폐기·검증 및 대북 보상·지원 → 핵 폐기 완료 이후 북한과 참가국들 간의 포괄적인 관계개선
 - 특히 검증을 통해 핵 동결이 확인되면 북한에 대한 에너지 제공 의사가 있음을 밝힘.

- <②대북 안전보장 3단계>: 대북 안전보장 의사 표명 → 잠정적인 안전 보장 → 항구적인 안전보장.

- <③핵동결 수용 조건 3가지>: HEU 프로그램 포함, 검증가능성 보장 및 궁극적인 폐기가 이뤄져야 함.

5. 일본

- 일본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미국과 적극 공조하는 입장을 드러냈는바, 다음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음.
 - 고이즈미 정권과 부시 정권의 밀월관계가 북핵 문제에 대한 완벽한 공조를 가능케 하고 있으며,

13) 「중앙일보」, 2004년 2월 27일.

- 6자회담 직전 납치문제에 대한 북·일 교섭이 이뤄짐으로써, 일본이 납치문제를 거론해서 회담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 가능성을 차단했음.
- 핵동결에 대한 보상도 할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은 제2차 북핵위기와 납치문제를 겪으면서 일본의 대북관점이 상당히 강경하게 변화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6. 러시아

- 참가국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떨어지는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면서 6자회담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함.
 - 검증을 통해 핵 동결이 확인되면 북한에 대해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한국의 입장도 지지함.
- 회담 대표인 료슈코프 차관은 6자회담에 진전이 없으면 오히려 불신이 가중되면서 군사적 개입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북핵문제가 미 대선 전에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함.¹⁴⁾

14) *Los Angeles Times*, March 1, 2004.

Ⅲ. 주요 쟁점

○ 제2차 6자회담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은 아래의 다섯 가지로 파악되는데, 모두 북핵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사안들임.

1. HEU 프로그램

○ 원칙적으로 HEU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북한과¹⁵⁾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미국의 입장 차이는 접점을 찾기 어려운 정도임.

○ HEU 프로그램은 북·미 쌍방이 부분적으로 양보해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정치적 사안이 아님.

- 북·미 가운데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술적 사안임.

○ 북한의 HEU 프로그램을 계속 추적해 온 미국은 최근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주도한 핵 밀거래 망이 발각되면서 구체적인 물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은 미국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면서 증거가 제시되

15) 김계관 수석대표는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HEU와 관련 다음과 같이 발언함:
“고농축 우라늄 문제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강조하는 것은 회담 진전에 제동을 거는 것이고 그들의 자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허튼 정보에 기초해 핵위기를 다시 만들었다. 부시 행정부가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핵동력 정책은 천연우라늄에 기초한 것이며, 농축우라늄과 상관이 없고 따라서 농축우라늄은 없다. 설비도 없고 과학자, 기술자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한다.” 「연합뉴스」, 2004년 2월 28일.

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플루토늄보다 훨씬 숨기기 쉬운 HEU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북한의 은닉을 촉진할 수 있다며 반대함.¹⁶⁾

○ HEU는 플루토늄에 비해 취급이 안전하며 소규모 시설에서의 생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최근 이란에서 발각된 러시아산 농축우라늄 핵연료(농축도 36%)가 북한에도 존재한다면 25개의 원심분리기를 1년만 가동하면 핵탄두 한개 분량의 HEU를 생산할 수 있음.¹⁷⁾

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한

○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한을 보유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이전의 원자력 활동 중단을 시사한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임.

- 예를 들어, 북한은 금년 초 중앙통신 논평('04.1.6)에서 “평화적 핵동력 공업까지 멈춰 세우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대담한 양보”라고 주장함.

○ 최근 18년간 베일에 가려있던 이란의 핵개발 사실이 반정부인사의 도움으로 밝혀지면서, 전면적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구실로 내세우고 뒤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계감이 팽배한 상태임.

16)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리처드 루가 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답변, 2004년 3월 2일. <http://www.ifins.org/pages/kison-archive-kn545.thm>

17) William Broad, “Uranium traveled to Iran via Russia, inspectors find,” *New York Times*, February 28, 2004.

- 국제 핵비확산 외교무대에서는 이러한 나라들을 “영악한 확산국가”(smart proliferator)라고 칭함.
-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핵 억제력 보유를 선언하고 NPT에서 탈퇴한 북한이 평화적인 핵 이용 권한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나라가 많지 않을 것임.
 - 특히 KEDO의 대북 경수로지원사업까지 거부하는 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평화적 이용 권한을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됨.
 - 미국의 CVID 원칙은 북한에서 원자력의 싹을 잘라내겠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상의 두 쟁점은 핵 폐기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것인 반면, 아래 세 가지 쟁점은 핵 폐기의 절차, 이에 대한 검증 및 대북 보상에 관한 것임.

3. 핵 폐기의 단계와 소요시간

- 합의된 대상에 대한 폐기를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이는 한국이 제시한 북핵 3단계 해법의 제2단계에 해당되는 것임.
- 핵을 협상의 자산으로 간주하는 북한은 폐기 절차를 세분화하고 폐기 시간을 지연시키려 할 것인 반면, 미국은 가급적 단기간 내에 핵 폐기를 완료하려 할 것으로 예상됨.

4. 핵 폐기 검증

- 핵 폐기의 검증에 대한 두 가지 주요 현안은 기술적인 절차와 검증 주체를 합의하는 것임.
- 검증절차와 관련, 핵 폐기 단계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매 단계별로 폐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검증절차가 함께 합의되어야 함.
- 검증 주체와 관련해서는 중동지역의 세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IAEA에 일임하는 방안 (이란).
 - UNSCOM(UN Special Commission)이나 UNMOVIC(UN Monitoring, Verification and Inspection Commission)과 같이 유엔안보리 차원의 북핵 사찰기구를 창설하는 방안 (이라크).
 - IAEA와 6자회담 참가국 전체 혹은 일부가 공동으로 검증단을 구성하는 방안 (리비아).

5. 단계별 보상의 내용과 주체

- 핵 폐기를 대가로 북한에 대해 누가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가의 문제도 중요한 쟁점사항임.
 - 효과는 극대화하되 비용은 최소화하려는 참가국들의 이익이 충돌하는 부분임.
- 보상문제는 관련국들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군사·전략적 요소들과 정치·외교적인 고려사항들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임.

- 제네바 합의에 근거한 경수로지원 사업의 속개 여부도 단계별 보상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 사업 자체를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적절한 시점에서 사업을 재개하거나 대체 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함.
 - 남북관계와 통일 이후의 에너지 문제를 고려할 때, 핵 폐기가 가시화되는 적절한 시점에서 경수로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IV. 종합평가와 전망

1. 종합평가

- 제2차 6자회담은 6자회담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뿌리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번 회담은 회담 시작 전의 희망과 기대에는 부합하지 못했으며¹⁸⁾, 북핵문제를 구성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차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북·미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며 양측의 견해차가 심하다는 사실이 향후 회담의 전도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음.
- 핵 폐기나 HEU 프로그램의 존재여부와 같은 핵심현안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도 없이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했기 때문에 실무그룹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함.
-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해법이 채택되지 못한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향후 대책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축적된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서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18) 예를 들어, 회담 전에 북한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외신보도가 있었음. 북한이 영변 핵시설 동결방침을 표명할 것이라는 아사히신문 보도. 『朝日新聞』, 2004년 2월 5일; 6자회담 직전에 북한이 IAEA와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는 보도. 『연합뉴스』, 2004년 2월 24일.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도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정권전복이 아니며 북한이 리비아의 선례를 따르면 김정일 정권을 인정할 수 있고, 미국에 대한 북한의 의심이 다소 해소된 결과 제2차 6자회담이 열리게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朝日新聞』, 2004년 2월 5일.

2. 전망

- 6자회담의 향배를 결정하는 두 가지 변수는 북한이 CVID 원칙을 수용할 의향이 있는가와 미국의 대선 정국이 될 것임.
 - 중국은 기존의 중재자 역할을 계속할 것이나 핵심쟁점에 대한 북·미의 의견차가 확고해질수록 중국의 역할과 열의는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임.¹⁹⁾

- <①CVID 원칙>: CVID는 미국이 불량국가의 핵을 포기시키는 원칙으로서 북한에 대해 이 원칙을 양보할 가능성은 없음.
 - 이는 북한이 CVID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6자회담의 성공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 뜻함.

- <②미국의 대선정국>: 이라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노선을 견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이 경우, 북한 역시 대선정국을 활용하여 북핵문제를 미 국내정치의 이슈로 부각시키려 할 것임.
 - 예를 들어, 제3차 6자회담을 전후해서 5MWe 원자로 가동중지를 선언함으로써, 동 조치를 둘러싸고 “핵 활동 동결” 조치로 해석하는 측과 “핵 억제력 강화” 수단으로 해석하는 측 사이에 갈등과 논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19) 이와 관련, 중국 관리들은 제2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불쾌해했다고 함. Joseph Kahn, “U.S. and North Korea agree to more talks.”

- 한편, 차기 6자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부시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아지게 되는 경우,
 - 미국이 외교적 해결노력을 포기하고 대북 압박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북핵 문제의 유엔안보리 이관을 시작으로 “확산방지안보구상”(PSI)을 강력하게 실천해서 북한을 압박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것임.

<부록>: 제2차 6자회담 의장성명 전문

1. 제 2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사이에 2004년 2월 25부터 28일까지 개최됐다.
2.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중국 왕이 외교부 부부장,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 일본 야부나카 미토지 아시아·대양주 국장, 한국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러시아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 미국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참석했다.
3. 6개국은 2차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문제에 관해 유익하고 긍정적인 협의가 개시됐고 또 모든 참가국들의 협의태도가 진지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회담을 통해 아직 차이점은 남아 있으나 참가국들은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했다.
4. 6개국은 한반도와 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 대해 그리고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대화와 평등에 기초한 협의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의지를 표명했다.
5. 6개국은 평화적으로 공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6개국은 핵문제 및 관련된 관심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6. 6개국은 대화 과정을 계속하기로 합의했고 2004년도 2분기 내 베이징에서 제 3차 6자회담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전체회의의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실무그룹의 임무 등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7. 북한과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대표단은 중국 측이 두 번에 걸친 6자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한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